

전북도 어항개발사업 닷 올린다

총사업비 314억원 투입 기반·편익시설 확충 어업인 생산성 향상 기대

전북도는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과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올해 314억원(국가어항 263, 지방어항 51)을 투자하여 어항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방축도항 개발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56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양장, 파계제 등을 시설할 예정으로 올해는 15억원을(참고, 지방어항) 투입, 물양장 매립공사(3,000㎡)를 추진 중이다.

또 어촌정주어항인 장자도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4억원을 투

자하여 방파제, 접안시설, 준설 등을 시설 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으로는 10억원을(참고, 어촌정주어항) 편성하여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하고 있으며 내년 초 착공 예정이다.

국가어항은 6개소(어청도, 말도, 연도, 구시포, 위도, 격포)이며, 지방어항은 11개소(개야도, 비안도, 선유3구, 무녀도, 방축도, 동호, 곰소, 식도, 공항, 송포, 성천),어촌정주어항은 14개소(아미도, 죽도, 선유1구, 선유2구, 무녀1구, 장자도, 관리도, 명도, 두리도, 도청, 모항, 왕포, 벌금, 대리), 소규모어항은 10개소(하왕등도, 치도, 진리, 전막, 정금, 거륜, 죽막, 작당)이다.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소형어선의 인양 및 평상시 수산물, 어구 등의 인양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부터 16억원을 투자하여 소형어선 인양기 31대를 설치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2억원을(참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투입하여 군산 선유3구항과 부안 도청항에 각각 설치한다.

서해안의 특성인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어선, 여객선 입·출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94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다기능 부잔교 15대를 설치 완료했고, 올해에는 11억 원을(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투자하여 군산 두리도항과 고창 동호항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어항 내 노후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한 경관개선과 어업인 안전보장을 위하여 금년도에 5억원을(폐작한 어항 만들기) 투자하여 군산 무녀2구항 진입도로 확장(L=182m)을 위해 친수블럭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고창군 동호항에 1억원을(참고

5. 어항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투자하여 안전난간 설치와 계류시설 및 옹벽 보수를 완료하고, 구시포항에 3억원을(참고, 어선계류시설 설치) 투자하여 부안교 1대를 설치 완료했다.

허베이스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지역 어항시설 보수·보강으로 어선의 입·출항 시 안전성 확보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8억원을(어항시설 보수보강) 투자하여 부안군 대리항에 해수소통구(15×24m), 식도항에 호안정비(100m)를 각각 완료했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항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어촌·어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로 지은 119안전센터 25일 전북소방본부는 임실군 임실읍에 새로 지은 119안전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11면>

도내 신선농산물 싸게 사는 '꿀팁'

삼락농정 장터 26~27일 개장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 20개 부스 30여개 업체 참여

전북도는 농협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도내 마을상품, 6차산업 인증품 및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9회 '전북 삼락농정 장터'를 26일~27일, 2일간 전북도청 다목적광장(민원실 뒤)에서 개장한다.

이번 장터는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전북 삼락농정 장터'로 20개 부스에서 시·군에서 추천한 30여개 업체(마을)가 참여한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 및 마을상품 등을 유통단계 없이 직접 소

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시중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북 삼락농정 장터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회(18일간) 운영하여 1억 9400만원 매출을 올려 판로가 어려운 중소농 및 마을공동체 등에서 생산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 삼락농정 장터'는 올해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마지막 장터로서,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도내 마을상품과 6차산업 인증품 및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입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지정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5명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여러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지정은 유명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유 변호사는 당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변호인들은 더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할 어떠한 담의성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3일 뒤 속행된 재판에서 "공판 진행을 위해 더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 법원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번 5명은 국선변호인 제도 이상 피고인 1인에게 배정된 최대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설 곳 잃은 장년은퇴자, 날개 달아드려요”

장년인재 서포터즈 신청접수 선정시 최대 1200만원 지원

전북도 경제산업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사업단이 창업팀 선정과 더불어 고경력 은퇴자(10년이상)의 고용창출을 위해 장년인재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년인재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관련분야 창업기업에 파견형태로 참여해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파트너 연계형부문에 참여하거나, 안정적인 자립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단 코칭해주는

코칭 연계형부문에 참여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도는 10월 18일부터 상시 모집으로 장년인재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 장년인재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년인재 서포터즈의 신청대상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는 만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창업 경력 포함)을 보유한 숙련 퇴직인력이며, 지원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기

술형 창업분야 3년이내의 (예비)창업기업이다. 대표가 만39세미만이라면 창업한 지 7년이내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관심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063-711-2140~2)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

직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기술자들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전국 6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남권역에서는 전북도가 유일하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통해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기술창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행안부, 지자체 평가 지표 개발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2018년 실적을 평가하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8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확정되는 '2019년 평가지표'는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 차원에서 지표체계를 국정과제와 연동해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 체계로 재편할 방침이다.

대신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표수를 감축하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발해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중소·벤처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 지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사물인터넷(IOT)·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 등 미래사회 선도지표를 개발, 평가해 민간부문의 신산업 육성에 따른 마중물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치 등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잘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지자체 행정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